

【 2018.4.27(금) 강원일보 】



건설협회 강원도회 정기총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오인철)는 2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어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춘천 도청 앞 도로에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플래카드가 빼곡하게 내걸려 있다. 박상동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측 어선이 북한수역에 입어하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한

다"고 말했다. 강대복 주문진 채낚기등 부선선주협회장은 "어자원 씨가 마르면 서이제는 동해안에서도 오징어가 '금징

어'로 불릴 정도"라며 남북공동조업 대책을 촉구했다. 남북정상회담특별취재반/구정민

건협 강원도회 정기총회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추진”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가 올해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과 불합리한 품셈 개선 등 공사비 적정 지급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25일 건협 강원도회는 강원도 춘천시 베어스호텔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오인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추진 및 비현실 품셈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물 유지보수품 신설 등 필요항목을 신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협 강원도회는 본회와 힘을 모아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병윤 건협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올해 인프라 투자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려는 기

조를 갖고 있다”며 “국회 입법활동과 유관기관 설득,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서 적정공사비 확보와 인프라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중점 추진사업과 연계해 지역 핵심 인프라 발굴 사업도 진행한다.

다음달 말까지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후화 상·하수 인프라 개선과 교통 인프라 사업 등 강원도 노후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협 강원도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건설문화 혁신 △4차 산업혁명 성장 기반 마련 △공정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구축 △경영활동 지원 내실화 및 서비스 확충 등을 올해 사업 목표로 확정했다.

남북경제협력 기대 속

지방선거 후보들도 남북교류 공약 '붐물'

남북 정상회담 훈풍에 편승해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너도나도 남북교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근로자가 남한으로 출퇴근하는 개성공단 역개념의 통일산업단지 조성 공약부터 관동팔경 현장학습 추진, 산천어 공동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3선 도전을 공식 발표하면서 교육 분야 남북교류 활성화를 선언했다. 그는 "남북 강원도에 자리 잡고 있는 관동팔경 현장학습, 학생 합창 페스티벌, 교사 교류와 같은 교육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진행하겠다"며 "분단된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당당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원 도 교육감 예비후보도 평화·통일 교육 실천과 교육 분야 남북교류 활성화를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시·도 교육청 공동 평화통일교육 교재 개발, 교육감 방북과 교원·학생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자치단체장 출마 후보들은 남북교류 단절로 말미암은 지역 공동화를 의식한 듯 청사진을 내놓으며 표심을 다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

교사 교류 등 교육협력 사업
북한 황폐지 복구사업 참여
금강산 가는길 복원 등 내놔

보로 등록된 자유한국당 윤승근 고성군수는 고성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고성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지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함명준 고성군수 예비후보는 개성공단 역 개념의 통일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함 후보는 "북한의 근로자가 고성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북한 근로자는 철도로 출퇴근하거나 공단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일 고성군수 예비후보는 북한 황폐지 복구 사업 참여, 북방물류기지 유치, 남북 공동 어로수역 협약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이순선 인제군수는 금강산 가는길 복원과 남북 산림 교류협력 사업, 북측 인접 군과의 교류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는 DMZ 셔틀버스 투어, 자전거와 바이크를 이용한 DMZ 라이딩 코스 조성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윤태용 양구군수 예비후보는 양구군과 인접한 북강원도 금강군, 창도군과의 교류 사업 추진 및 DMZ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화천군수 예비후보도 DMZ 국립공원 공동개발, 사항노루 복원사업,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성장한 화천 산천어 축제의 산천어 공동양식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다.

무소속 김종남 강릉시장 예비후보는 강릉의 미래 100년을 위해 '동해북부선 연결 강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통 공약으로 채택하자고 다른 후보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26일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의 남북 교류협력 공약 제시는 평화 분위기 조성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지방선거 국면을 틈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가시화될지 주목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가시화될지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는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한다는 이유로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의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DMZ)로 인식된 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도내 접경지역 등은 42개 개별법에 따라 도 전체 면적의 1.7배인 2만7848㎢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다.

특히 군사·산림·환경 분야 규제지역만 2만2564㎢로, 서울시 면적의 37.3배에 달한다.

반세기 넘는 규제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강원도, 이달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추진위한 정부와 협의 계획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분단 도인 강원도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한민족 공동번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내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개념을 '평화+특별+자치'로 잡았다.

평화기반 조성, 통일경제 대비 특구 지정, 교류 활성화 협력사업, 통일·북방경제 선도 등을 중심축으로 접경지역 특구를 운영한다.

특별도는 남북교류, 통일 의제와 관련해 차별화된 분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고, 자치는 남북공동 시범 자치구역을 운영해 남북일제(南北一制)와 평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념이다.

도는 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남북간 지리적 접근성, DMZ 및 백두대간, 동해를 공유하는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해 통일의 시범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정부 입법으로 특별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국회 등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